

벼농사, 조선인 그리고 근대 만주의 형성

- 『근대 만주 벼농사 발달과 이주 조선인』(김영, 국학자료원, 2004) -

김기훈*

현재 거의 200만에 육박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은 19세기 중엽 이후에 시작되어 20세기 중엽까지 약 백년 간에 걸쳐 이루어진 만주 이주 조선인을 근간으로 형성되었다. 조선인의 만주 이주사는 결코 평탄한 과정이 아니었다. 조선과 만주를 둘러싼 정치세력의 변화는 그들의 생활 조건을 각박하게 만들어 주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대부분이 소작농으로서 이주 생활 자체도 결코 여유롭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여 년 간 이주의 물결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책의 저자인 김영은 그 주요한 원인을 조선인의 탁월한 벼농사 기술에서 찾는다. 원래 만주 지방은 기후 조건 등이 대두와 고량 등 밭작물에는 유리하지만, 벼농사에는 적합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조선 이주민들은 벼농사 기술을 간난신고 끝에 만주 기후에 접목시키는 데 성공하여 자신들의 특기로 삼게 되었다. 그 결과 만주 현지인들도 벼농사를 고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농업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수리 시설 확충이나 습지를 개간하는 정책이 수행되는 등 만주 벼농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본격적인 만주 벼농사가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자가 벼농사를 키워드로 삼고 조선인의 근대 만주 이주사를 재조명해 보고, 동시에 근대 만주 벼농사의 발달 과정을 검토해 보게 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저자는 중국 요녕 대학 출신의 조선족 연구자로서, 이 책은 그가 2003

* 육군사관학교 사학과

년 서울대학교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조선인 만주이민 연구사를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특기할만한 현상의 하나가 있다. 많은 조선족 연구자들이 한국 대학원이나 연구소에 유학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만주 이주사를 연구하고 있고, 그 성과가 한국 학계에 상당한 기여를 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족 연구자들은 중국 현지의 자료를 손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 그간 한국학계의 취약점에 해당하는 중국측 자료 이용 문제를 많이 보완해 주었다. 김영의 연구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저자도 이를 잘 의식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만주에 있는 주요 당안관 자료들을 새로 발굴하고, 정리하여 1920년대 만주 당국의 조선 이주민과 벼농사와 관련된 정책들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측 자료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관련 연구자들에게 이 책이 신선한 충격을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점이다.

저자는 근대 만주 벼농사 발달 과정을 조선인 이민과 긴밀하게 연결 지으면서 네 시기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첫 번째 시기(1875~1915)는 남만 지역에서 조선 도작법이 전파 보급되는 벼농사 초창기에 해당한다. 통화현에서 조선인 이주민에 의하여 벼농사가 최초로 성공적으로 재배되었던 1875년을 기점으로 하여 1915년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체결된 만몽조약 직전까지가 그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청 정부와 민국 정부가 일으킨 만주 개발 붐이 일어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뛰어난 벼농사 기술을 가진 조선 이주민들은 중국인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았다. 한편 만주에 산재한 광대한 저습지와 황무지는 수전 개간을 바라는 조선 이주민들에게는 희망의 땅이었다. 저자는 이런 점을 들어, 이 시기에 만주 이주민들이 급증한 것은 조선 내의 정치, 사회경제적인 배출 요인보다 만주의 유인 요소가 더 큰 작용을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 시기(1915~1931)는 만몽조약 이후 만주사변까지의 시기에 해당한다. 1915년 만몽조약 이후 “일제가 상조권을 내세우며 조선인까지 이용하여 침략을 강화하자” 만주 당국은 조선인의 토지 소유금지, 엄격한 소작 규제, 심지어 소작 불허, 제한된 고용만 허용 혹은 구축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종전의 만주 이주사 연구에서는 통상 탄압기, 박해기 등으로 분류되던 시기이다. 저자는 “늘 포악하게만 그려졌던” 만주 관헌들이 사실은 벼농사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고, 또한 규제 정책도 현실적으로 그대로 시행되지 못하였음을 여러 자료들을 통하여 입증하고자 노력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 시기에 만주 관헌들은 저습지를 포괄한 황무지를 지속적으로 감가 불하하는 동시에, 중국인 개개인과 稻田公社의 벼농사를 권장하고 또한 전문적인 관리기구인 수리국과 수리분국을 설립하는 등 수전 발전의 기반이 되는 각종의 수리 관리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저자는 이것이 “조선인의 수전 개발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당시 만주당국의 정책도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또한 중국 정부 측이 일제 침략을 저지한다는 의미에서 조선인에 대한 규제 정책을 강화하여 조선인 이민의 벼농사 여건이 악화되었음은 사실이지만, 그 정책과 정책 실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저자에 의하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만보산 사건(1931)이 바로 만주 당국의 정책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세 번째 시기(1932~1939)와 네 번째 시기(1939~1945)는 일제에 의하여 수립된 괴뢰 만주국의 시기에 해당한다. 일제는 일본 제국 내 식량 사정이 악화되기 이전인 1939년까지는 조선인 이민을 통제하는 정책을 취하였고, 미곡 증산도 만주에서의 수요를 만족시켜주는 자급자족의 수준까지로 통제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중일전쟁 발발(1937), 태평양전쟁의 개시(1941)와 아울러 전시 수요 미곡량이 급증하고, 조선의 한발

로 인한 1939년의 미곡 생산량 급감 등이 원인이 되어 만주국 후반기에는 수전 개발 정책이 급선회하였다. 일제는 제국 내의 전시 미곡 사정 악화를 충당하기 위하여 만주를 식량 공급기지로 삼고, 대규모의 수리사업을 통해 수전 면적을 확대하는 한편, 조선인 이주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쌀 증산의 임무를 부과하였다. 그 결과 쌀 증산이 이루어졌지만 그 대부분이 싼 값으로 공출되었음을 밝히면서 저지는 수전 발달과 미곡 증산이 실제 생산을 담당한 이주 조선인의 생활 개선과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의 간행으로 우리 학계는 만주 이주 조선인의 업적으로 자타가 인정해오던 만주 벼농사의 발달 과정을 통사적이며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간의 연구가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주제나 시기가 한정되어 있어 그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체를 살펴본 연구라는 점만으로도 이 책은 그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은 시간적으로 전체를 개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벼농사 발달 과정과 관련된 필수적인 다양한 세부 주제들도 적절하게 다루고 있다. 벼의 종류나 농법 등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지주 소작간의 관계, 소작 형태 등 사회적인 측면도 빠짐없이 분석하고 있다. 만주의 벼농사는 조선인 농민만 경작한 것이 아니다. 비록 적은 비중이었지만, 중국 농민이나 일본 농민도 수전 경작에 참여하고 있다. 저지는 이런 부분도 빼놓지 않고 적절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이 책을 <조선인 이주사>는 물론 <근대 만주 벼농사 발달> 과정을 편파적이지 않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연구서로 만든 것 같다.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의 하나는 만주 이주 조선인을 벼농사와 연관하여 연구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간도 즉 연변 위주의 기술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동부 만주에 속하는 연변 지역은 조선인 이주를 언급할 때 그 역사성으로 보나, 이주민의 양적인 면에서 보나 항상 중심적인 위치를 점해 왔다. 그러다보니 남만주나 북만주의 조선인 역사는 주변적인 이야기로 취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키가 의외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조선인은 벼농사에 탁월하다”라는 담론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 키를 요녕성 즉 남만주 출신의 저자가 발견해 내었다는 것은 우연치고는 매우 재미있는 우연이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해석의 참신성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러한 장점이 전편에 고루 적용되지는 못한 것 같다. 만주국 시대를 언급한 부분에서는 만주사변 이전을 다룬 부분에 비하여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만주국 시대의 대부분의 자료들이 일본측 자료이고, 그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조차 때로 간과되고 있다는 점은 기왕의 자료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일제의 조선인 만주 이민 정책은 처음부터 통제 정책이 아니라, 초기에는 방임 정책을 취하다가 후에 통제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명쾌하게 언급되고 있지 못하다. 동아 권업, 만선 척식회사, 만주 척식회사 등의 토지회사 겸 이민회사 이름들이 자주 거명된다. 하지만 그 회사들의 설립 동기나 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설명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이 일제의 이민정책과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만주국 시대 부분에서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저자의 참신한 시도 중의 백미는 1920년대 중국 관헌의 박해 정책을 새롭게 조명해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때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

도 일부 눈에 뜨인다. 예를 들면, 저자의 설명 구조 속에 등장하는 조선 이주 농민들은 정치적 주체성이 거의 없는 존재이다. 일제가 이용하면 그대로 일제의 첩병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이것은 당시 조선 농민 중에는 일본의 침략 도구로 이용되지 않고 오히려 극도의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조선인들도 있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또한, 만주 당국의 무차별적인 반조선인 정책이 오히려 반중국적인 경향을 발생시켜 ‘자생적 반중 친일’ 농민들이 발생할 수 있었던 개연성과 그 책임은 세련되지 못한 조선인 정책을 취한 만주 당국에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사소하지만 연구의 학술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다. 돌발적으로 한중 민족 간의 우의를 강조하는 언급이 그러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중국인과 조선인 이민은 서로 동정하고 돕고 오랜 공동생활과 생산 과정의 참여 등으로 그들의 유대는 더욱 끈끈해졌다. 일제가 민족 이간 정책을 썼지만 두 민족 간의 접촉으로 인하여 어려운 사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190쪽) 이훈구의 주장 외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을 방증할 만한 자료를 들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그 반대의 자료가 더 많다. 그 자신이 명백하게 인정하였듯이 1920년대에 중국 당국이나 만주 지주들의 박해나 착취가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한중 민족 간의 “끈끈한 유대”와 같은 해석을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의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한중 우호관계를 역사적으로 입증하려는 ‘선한’ 의도가 지나치게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사회적 갈등과 조화라는 이 문제는 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몇 가지 지적들을 하였지만, 이것이 이 책이 갖고 있는 학문적 성과와

학계의 기여도를 축소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은 물론 아니다. 만주의 벼농사와 그 주역이었던 조선인 이주민의 역사를 통합하여 구조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이 책은 앞으로 만주 이주사 연구자들에게 필독서의 하나가 될 만한 충분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